

농업·서비스업 등 취약산업 경쟁력 살리면 일자리 창출은 저절로 따라와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오늘날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대부분 문제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안 생긴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일례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되려면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역시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계가 있다. 취직이 되고 결혼을 해도 집을 살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점점 그 연령대가 늦어지고 결혼인구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으니 실수요자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일자리 부족이 모든 경제 문제의 뿌리

최근 들어 일자리는 안 생기고,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달리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고 있다. 여기에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과잉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들의 전반적인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는데, 독립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니 그들끼리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자의 소득도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니 700만 자영업자 전체가 우리 경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역시 그 뿌리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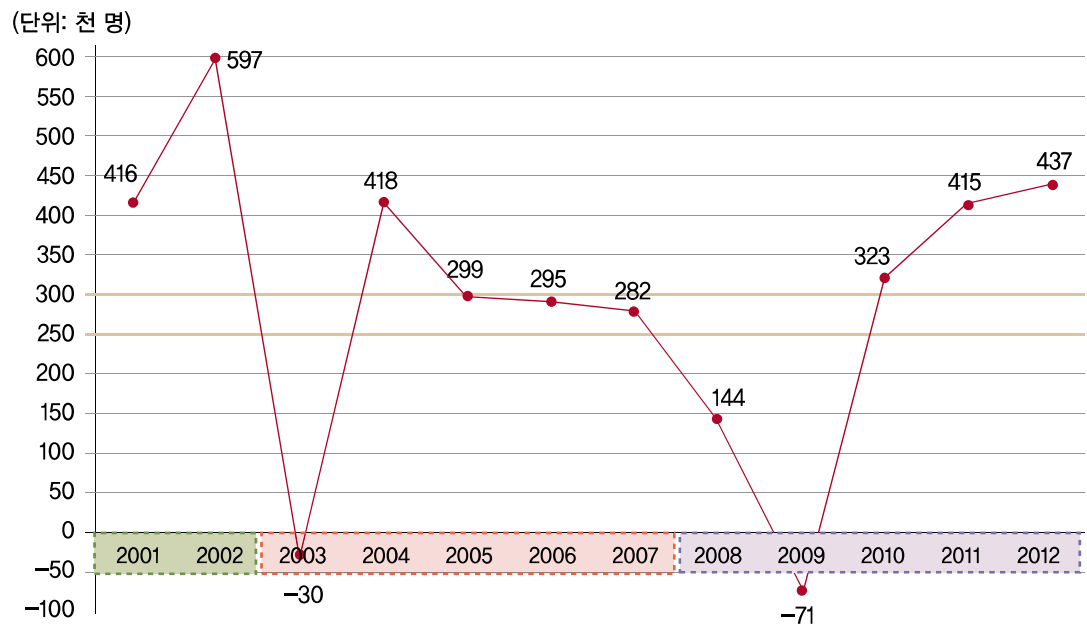
정부는 전기요금을 안정시키고 은행 이익을 줄이는 등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저해해 확대재생산을 어렵게 함으로써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 구조를 불러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 우리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제조업에서 새로운 고용 창출 기대하기 어려워

우리나라 제조업은 1991년에 고용의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연평균 5~6만이 감소하는 등 점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조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때도 있었지만, 이는 제조업이 다시 고용을 많이 창출하게 되었다고 판단하는 것보다, 외환위기 때 상당수 해고(128만 개 일자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동으로 조금 늘어났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앞으로 제조업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설상가상으로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연평균 12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연평균 3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나야 하는데,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까먹고 있는 12만 개의 일자리를 감안한다면 연 42만 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셈이다.

■ 최근의 고용증감 동향



2009년 기준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7만 수준이었다가 그 이후 12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지만 그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2009년 이후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에서 66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성별, 업종별, 연령별 고용 증가 통계를 보면 대다수가 50대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이다. 최근 창출된 126만 개의 일자리 중 66만 개는 이렇게 채워지고, 나머지 60만 개 역시 제대로 된 일자리라 하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의 분야는 앞서 언급했듯이 과당경쟁 상황이므로 현재의 반 이하로 그 분야 종사자가 줄어야 적정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정리하면 우리 경제의 58% 업종에서 고용을 더 늘릴 수 없거나 오히려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결국 나머지 42%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정치권은 너무나 쉽게 '고용창출'을 외친다. 정치인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하는데,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인들은 너무나 단편적인 정책으로 수치상으로만 성과를 보여주려 한다. 30~40대 젊은이들을 위한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생각하기보다 파트타임, 50~60대 일자리, 창업 등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알뜰주유소 1,000개를 돌파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축했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계층의 일자리를 줄인 셈이다. 이는 단편적인 예일 뿐 '고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시 고쳐야 할 정책들이 꽤 있다.

농업과 서비스 분야 선진화가 대안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제조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취약산업인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그래야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조업이 주력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것도 없던 지난 시절 해외에서 기술과 자본을 들여와 우리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농업과 서비스업 역시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 등을 벤치마킹하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창조경제를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농업은 아직도 단순한 농사 수준이지 농업이라 할 수 없다. 돈을 벌어야 '업'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수출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진 국가들을 모방하고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업 분야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규제 개선이다.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에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은행이 높은 수익을 내는 것에 국민들이나 정부, 언론 등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도 그 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라'는 요구를 한다. 그런데 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신용등급이 매우 높아야 하고,

높은 신용평가를 받으려면 해마다 자본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한다. 그러나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요구인 셈이다.

서비스업 분야도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업종에서 경쟁력이 생기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다.